

일부 대리운전업체의 탈선 대리기사 보험료 유용 의혹

노조 “43개월 264만원 냈는데 보험사엔 27만원 납부” 전남경찰, 여수·순천·광양 기반 둔 업체 3곳 압수수색

대리운전 기사들의 자동차보험료를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빼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여수·순천·광양 지역의 경우 이들 대리운전업체들로 인해 무보험 운전자들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점에서 자칫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연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상당수 대리운전업체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 수사 대상 지역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광주·전남 2500여개 대리운전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전남지방경찰청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남지부(이하 대리운전노조 전남지부)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수·순천·광양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리운전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해당 업체에서 보관 중인 대리기사들의 보험료 납입 통장내역서와 자동차보험증 등 확보해 대리운전기사들이 낸 보험료 수준의 보험 가입이 진행됐는지 여부를 확인중이다.

이미 대리운전노조 전남지부의 경우



대리운전기사 한 명당 매월 5만5000원~6만 원씩 납부한 것과 달리, 실제 보험가입료가 못 미치는 수준인 점을 확인, 경찰에 대리운전업체의 보험료 유용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노조측은 대리운전기사 A씨가 지난 3년5개월(43개월) 보험료로 264만 원을 납부했는데, 실제 보험사에 납부된 금액은 27만5000원에 불과했다는 등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측 주장대로라면 대리기사는 연간 70만원 수준의 자동차보험료를 내지만 실제 보험상품은 훨씬 못 미칠 뿐 아니라 아예 보험가입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칫 차량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대리운전 소비자들이 보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할 우려도 높아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 형편이다.

경찰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관련 내용을 인지한 뒤 즉각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한편, 대리운전업체의 보험료 유용 의혹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광주의 경우 2300곳의 대리운전 업체(전화번호 등록기준)가 2700~2800명의 대리운전기사들을 동원, 영업 활동을 벌이면서 경정이 지열한 실정이다.

광주지부 측은 보험사 등을 통해 일부 보험료를 확인한 결과, 40대 기준 보험료는 5만2000~3000원 수준인데 일부 업체에서 받는 보험료는 평균 6만 원으로 7000~8000원 가량 더 받고 있는 만큼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우 적절한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 및 실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공예창작촌 전통가마 화입식 16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열린 '2014년 전통가마 화입식(火入式)'에서 참석자들이 가마에 첫 불을 지피고 있다. 빛고을공예창작촌은 전통 도자기 공예의 명맥을 잇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원전 때문에 갑상선암 피해” 1336명 한수원 상대 소송 제기

한빛원전 인근 34명 포함

영광 핵 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 행동과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1차 소송인단은 원전 인근 주민 갑상선암 피해를 주장하는 301명(영광 34명·고리 191명·월성 46명·울진 30명)과 가족 등 1336명이다. 원고 자격은 영광 한빛원전 등 국내 원전으로부터 10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이다.

고리 원전 주변 주민들의 소송 참여가 많은 것은 지난 10월 17일 '원전에서 배출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 물질이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판결 이후 부산지역 언론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환경단체들은 지난 10월 23일부터 지난 달 30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이날 소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접수했다. 2차 공동소송 원고모집도 조만간 들어갈 예정이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 95.5%는 최근 10년 내에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으며, 남

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83.8%로 월등히 높았다고 환경단체들은 전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한수원이 원전 가동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지난 10월 고리원전 인근에 살고 있는 이진섭씨(48) 가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선에 장기간 노출된 주민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면 원전 운영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바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영장 청구 검토

검찰, 오늘 소환 조사

증거인멸 지시 여부 추궁

‘땅콩 회항’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가 16일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기내 견과류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기장이 하도급 규정된 항공기 승무원 지휘·감독을 사실상 직접하고 이득을 위해 월주료로 향하던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신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수사 상황이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일(17일)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조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의 적용 여부는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7일 출석하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여승무원의 어깨를 밀

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등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지시로 회사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 등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도 나온 만큼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피의자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조 전 부사장 한 명 뿐이지만, 회사 차원의 회유와 협박을 통한 ‘증거인멸’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한항공 임원 등이 추가로 소환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관할 위반’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법원의 ‘관할 위반’ 선고와 관련,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16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업)의 ‘관할 위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남업체 인건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로 세월호 참사 당시 박모(48·총경) 해경 수색과장, 재난대피계 나모(42) 경감 등을 광주지법에 기소했지만 법원은 ‘관할을 위반했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 이후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반·부당한 판결”이라며 항

소심 절차를 생략한 채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관할 논란으로 지연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항소 절차를 따르는 것이 본안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경 간부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관할 위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모텔 간 부킹남 지갑 훔쳐 줄행랑



○→술집에서 ‘부킹’을 통해 만난 동갑내기 모텔에 투숙했다가 돈만 챙겨 달아난 ‘대법한’ 10대 여성이 상대의 신고로 경찰서행.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서모(여·19)양은 지난 9월 28일 새벽 2시에 광주시 동구 불로동 T모텔에 이날 밤 술집에서 처음 만난 윤모(19)군과 투숙했다가 그가 잠 사이 지갑에 있던 현금(3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동중 전과가 있던 서씨는 경찰의 통신 수사 끝에 검거됐는데, 그는 경찰에서 “뭉쳐 누운 친구 병문안을 가고 싶었는데 차비가 없어서 순간 지갑에 손을 댔다”며 궁색한 변명. /백희준기자 bhj@

국립순천대학교

2015학년도 특성화고교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

- 지원자격 | 특성화고교(농업, 공업, 상업, 실업, 전문계고, 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이상 산업체 근무자
- 입학전형 | 무시험 입학가능(서류 및 면접 선발)
- 모집학과 | 사회과학대학 물류비즈니스학과 & 공과대학 융합산업학과
- 정규학과와 동일한 학사학위 취득
- 수업은 주2~3일 야간 운영
- 국립대학의 저렴한 학비와 다양한 장학금 혜택 (2014학년도 장학금 지급율 100%)

1. 모집시기 : 정시 [2014년 12월 19일(금) ~ 12월 24일(수)]
2. 모집단위 학과

단과대학	학과	모집인원	비고
사회과학대학	물류비즈니스학과	35명	
공과대학	융합산업학과	35명	
3.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4. 12. 19(금)~12. 24(수) 18:00까지	유헤이어플라이 http://www.uwayapply.com 진학어플라이 http://jinhakapply.com
서류제출	2014. 12. 26(금) 18:00까지	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540-950 전남 순천시 중앙로255 순천대학교 입학관리과
면접고사	2015. 1. 21(수)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발표	2015. 1. 29(금)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출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5. 2. 4(수)~2. 11(수)	입학안내 홈페이지 또는 개별 통지
등록금 납부	2015. 2. 5(목)~2. 12(목)	지정 금융기관
	2015. 1. 30(금)~2. 3(화)	지정 금융기관
4.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제출서류
특성화고(농업, 공업, 상업, 실업, 전문계고, 마이스터고교 포함)를 졸업한 자로 산업체 근무경력 3년이상 재직자(2015. 3. 1. 기준 재직자에 한함)	1. 1. 1. 입학원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원고 납세증명서 각 1부) 3. 고교 졸업증명서 1부(온라인 제공 비동의자는 학교생활기록부 1부)
5. 문의처
 - 평생학습중심대학 후진학거점센터 : 750-5120
 - 물류비즈니스학과 사무실 : 750-5110
 - 융합산업학과 사무실 : 750-3580

꿈을 향한 도전! 세계로! 미래로!

국립순천대학교